

오피니언

11

사설

다전공 이수 기준학점 하향, 전문성은 어찌나

2026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으로 일부 학과에 대한 다전공 이수 기준 학점이 하향 조정됐다. 다전공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학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다전공 학생들의 학습 부담 완화라는 긍정적인 면과 함께 대학의 본래 목적인 교육 측면에서는 우려되는 점도 동시에 존재한다.

개편 전까지 다전공 이수 학생들은 본전공으로 이수하는 학생들에 비해 대체로 약 20학점 가량 낮은 이수 기준을 적용받아 왔다. 이번 조치로 다전공 학생들의 이수 기준은 학과별로 최소 2학점부터 최대 9학점까지 추가 하향된다.

9학점이 하향된 소프트웨어융합학과와 경우, 단일전공과정 이수 시 88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지만, 다전공과정 이수 시에는 51학점만 이수해도 전공 과정 이수가 인정된다. 본전공생과 다전공

생 사이 37학점의 격차는 자신의 분야를 이제 막 공부하려 하는 학생들에게 분명 적은 차이는 아닐 것이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교수 대다수는 “본전공 학생들과 똑같은 인정을 받고 싶다면 똑같은 학점을 이수하는 것이 정상인데, 실제로 이수는 적게 하고 학위는 여러 개를 받고 있는데도 거기서 더 바랄 필요가 있나”며 의문을 내비쳤다. 또 “사회에 나가서 본전공생들과 똑같은 졸업생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을 것이다”며 다전공을 이수하게 될 학생들을 향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새로운 정책 도입에는 소음이 있기 마련이지만, 곳곳에서 흘러나오는 우려들은 실제 예상되는 문제들이기에 마냥 덮어둘 수만은 없다.

당장 2026학년도 입학생부터 다전공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관련 세부 정책들도 속

속 발표되고 있다. 기계공학부 지능로봇공학전공과 산업경영공학과에서는 다전공생의 타전공 전공학점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해당 학점을 최대 9학점까지 인정하는 제도를 새로이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는 위 결정의 배경으로 또 한번 “학습 부담 완화”를 언급했다.

최근 많은 대학이 다전공 확대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한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분야의 지식을 함양하도록 해 사회가 원하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위함이다. 하지만 야심차게 도입한 다전공 정책이 그저 다른 전공을 ‘경험해 보는 것’에 그친다면, 학생들은 어느 분야에서도 충분한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대학을 떠나게 될 위험에 놓인다. 전공이 더 이상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대학 교육이 제공해야 할 핵심 가치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다전공 확대 정책이 ‘융합인재 양성’이라는 본래 취지를 따르기 위해서는 학습 부담 완화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학습의 질을 담보하는 제도를 설계하는 것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 다전공 확대는 전공의 가치를 약화시키기 위한 정책이 아니다. 오히려 전공의 의미를 새로운 방식으로 확장하기 위한 시도다.

학생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는 정책을 도입했다면, 그 선택이 교육적 의미를 가지도록 설계하는 책임도 학교에 있다. 전공 이수의 총량을 줄이는 방식이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개선하는 방향인지, 아니면 전공 교육의 밀도를 낮추는 방향일지는 학교에 달렸다. 해당 전공의 필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실질적인 논의와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세시봉

시안전불감증

원희재 기자
whj6470@khu.ac.kr



최근 SNS에서 화제가 된 영상이 있다. 청년들이 AI로 만든 가짜 영상과 사진을 부모님께 보여준 뒤 반응을 촬영하는 영상이다. 강도나 노숙자로 보이는 낯선 인물을 현관이나 집 내부 사진에 합성해 보내는 식이다. 부모님들은 창작물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에 실제 경찰에 전화까지 했다는 일화도 종종 들려왔다. 누군가에게는 장난일 수 있지만, 이는 AI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문제는 이러한 위험에 비해 경계심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이다. 퓨리서치센터가 실시한 AI 인식 조사에서 한국은 기술에 대한 우려를 표한 응답 비율이 25개국 중 가장 낮았다. 특히 20대 청년층의 신뢰도는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AI 관련 영상에서 네티즌의 반응을 보면 AI 기술 발전으로 사실 구분이 어려워 두렵다는 반응도 간혹 있었지만, 대부분은 흥미롭다며 웃어넘기는 반응이 많았다. 이는 많은 청년층이 ‘AI 안전 불감증’에 처해있다는 방증이다.

최근 여러 지자체는 ‘AI 공존도시’로 행정 전반에 AX(AI Transformation)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얼마 전 동대문구 또한 AI 공존도시 선포식을 열어 취재를 다녀왔다. AX는 단순 보조 도구를 넘어 AI 에이전트가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체계를 뜻한다. 문제는 AI가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AI가 지자체 행정 전반에 적용되는 만큼 그로 인한 오류나 사고 발생 시 피해는 특정 부서를 넘어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될 여지가 있다. AI의 화려함 속 숨겨진 이면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AI 기술의 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현재 AI 기술은 기업, 행정, 문화 등 다방면으로 인류의 삶을 편리하게 뒤바꿔 놓았다. 하지만 AI 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다. 특히 사생활과 개인정보에 대한 민감도가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한국 사회 특성상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AI 기술에 대한 섬세한 논의가 필요하다. AI 기술 자체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닌 AI를 활용하는 주체인 인간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이란 유학생 인터뷰

눈물의 인터뷰

이서현 기자
is4203850@khu.ac.kr



지난해 12월부터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이란에서 온 우리학교 유학생 A씨를 만났다. 지난 두 달 동안 그가 겪은 감정을 고스란히 들으며 기자이기 전에 같은 사람으로서 눈물을 흘렸다. 뉴스로 접하는 것 이상으로 개인이 겪는 슬픔은 무거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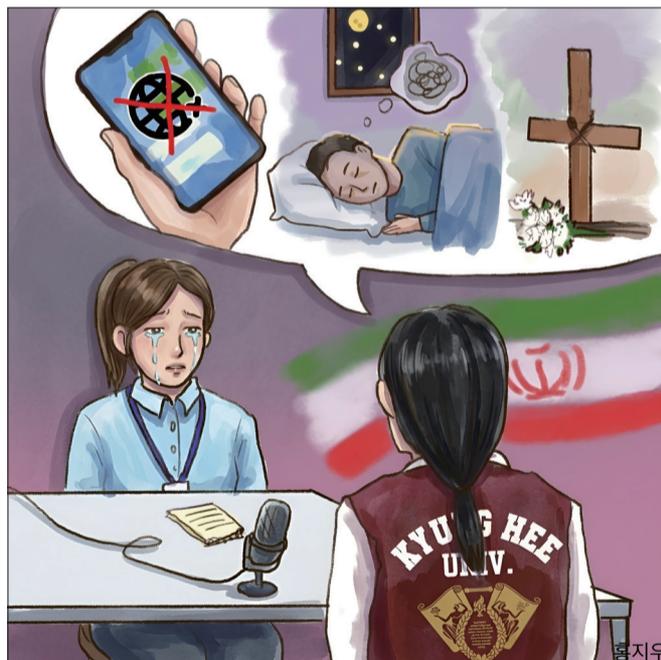
시위의 근본 원인은 물가 급등과 정치 체제에 쌓인 불만이였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을 통해 왕정 체제를 무너뜨리고 이슬람 공화국을 세웠다. 신정 공화국 체제로 종교에 의한 최고지도자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함께 통치하는 체제다. 이런 변화는 국민들의 삶에도 깊숙이 들어왔다.

히잡 착용 의무화, 성소수자 탄압, 여성의 스포츠 관람 금지 등 이슬람 근본주의 이념에 기반한 정책들이 시행되면서다.

A씨는 자신이 자라오면서 느낀 부담한 것들을 토로했다. 엄격한 외출이나 대학교에서 남학생과 나란히 앉아 책을 읽었다는 이유로 퇴학을 당할 뻔했던 경험 등. 그에게 이란은 ‘아무리 노력해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나라’라는 불안과 분노를 남겼다.

특히 지난 1월 8일 이란에서 가족, 친구들과 연락이 끊겼던 이야기는 나를 눈물짓게 했다. 거리로 뛰쳐나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식과 함께 2주간 어떤 연락도 닿지 않아 매일 잠 못 이루던 그날의 이야기를 듣고 당사자는 얼마나 불안했는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다.

독재 정권에 의해 사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영화에서 보거나 부모님 세대에 전해지는, 현대에는 없을 이야기로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도 이란에서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 청년에서 노인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A씨가 우리에게 바란 건 ‘잊히지 않기 위한 작은 관심’이었다.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는 같은 인간으로서 그들에게 관심을 보낸다.



만평 잠 못 이루던 그날 밤의 이야기는 나를 울게 만들었다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김진상 | 편집인 신동면 | 편집장 권도연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 인쇄 (주)에스엠씨앤피